

# 우리경제의 고비용 - 저효율구조 개선방향

- 한국은행 -

## 1. 머리말

-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하강국면이 보다 뚜렷해지는데 가운데 경상수지가 큰 폭의 적자를 지속하고 물가면에서도 불안요인이 상존함.
- 이와 같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엔화의 약세, 반도체 등 수출 주종품목의 가격하락과 같은 외부요인에도 그 원인이 있으나, 94년 이후의 과속성장에 따른 부작용이 현재화된 데다 고비용 - 저효율 경제체질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된 데에 기인함.
- 따라서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고비용 - 저효율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.

- 지난 10년간 제조업 명목임금은 연평균 15.3%, 노동생산성 상승률을 감안한 단위노동비용은 5.6%의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음.
- 이 기간중 일본과 대만은 명목임금이 각각 2.7%와 9.8% 상승에 그쳤으며, 단위노동비용은 일본

〈표-1〉 제조업 임금상승률 비교  
(86~95년중 평균)

	한 국	일 본	대 만
명목임금상승률	15.3	2.7	9.8
노동생산성증가율	9.2	3.1	6.4
단위노동비용 상승률	5.6	-0.5	3.5

(단위 : %)  
 〈자료〉 한국은행, 조사통계월보  
 일본 총무청 통계국, 일본통계월보  
 대만 행정원 경제개발위원회, 자유중국지공업  
 (自由中國之工業)

## 2. 고비용 - 저효율 경제의 현황

### 가. 인건비

- 제조업 인건비 부담률\*(인건비/매출액)이 80년대 중반의 약 10%에서 95년에는 13.5%로 높아졌음.
- \*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률 상승폭이 중소기업보다 큼.

〈표-2〉 한국, 일본, 대만의 제조업 월평균 임금추이  
(단위 : 달러, 배)

	1985	1995
한국	310	1,458
일본	1,256(4.1)	4,153(2.8)
대만	319(1.0)	1,225(0.8)

〈주〉 1) ( ) 내는 한국대비임.  
 〈자료〉 앞 표와 동일

은 0.5% 하락, 대만은 3.5% 상승하였음.

- 우리나라의 제조업 월평균임금을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보면 85년 중에는 일본의 1/4, 대만과는 비슷한 수준이었으나, 95년중에는 일본의 1/3, 대만의 1.2배로 높아졌음.

### 나. 금융비용

- 제조업 금융비용 부담률(금융비용/매출액)이 5.6%로서 일본과 대만의 3~4배에 달함.
  - 이는 금리수준과 기업의 부채비율이 모두 크게 높은데 기인함.

〈표-3〉 제조업 금융비용관련 주요지표 비교

(단위 : %)

	한 국		일본	대만
	85	95	94	94
차입금 평균이자율	13.4	11.7	4.1	6.2
대기업	13.3	11.5	-	-
중소기업	14.4	12.3	-	-
부채비율	348.4	286.8	153.3	87.2
대기업	344.7	268.3	46.0	-
중소기업	369.6	380.6	40.6	-
금융비용부담률	5.3	5.6	1.4	1.7
대기업	5.7	6.1	-	-
중소기업	3.9	4.2	-	-

〈자료〉 한국은행, 기업경영분석  
 일본은행, 주요기업경영분석  
 대만은행, 공업재무상황 조사보고

- 금융비용 부담률이 90년의 5.1%에서 95년에는 5.6%로 상승하였는데, 이는 차입금리가 소폭 하락 (90년 12.7% → 95년 11.7%)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잔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주로 기인함.

### 다. 지가

- 지가는 지난 10년간 2.5배로 상승하여 소비자물가

상승(1.8배)을 훨씬 앞지름.

- 이 기간중 공업용지 가격은 3.1배 상승하여 주거용지(2.6배) 및 상업용지(2.5배)가격 상승폭을 상회함.
- 공업단지 분양가격이 중국 및 동남아개도국의 5~25배,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10~45배 높음.

### 라. 물류비용

- 기업의 물류비용이 GDP의 16%, 매출액의 14%에 달하여 미국 일본에 비해 훨씬 높음.

〈표-4〉 물류비용 부담률 비교

(단위 : %)

	한국(94)	미국(93)	일본(93)
물류비용/GDP	15.7	10.5	8.8
물류비용/매출액 (제조업)	14.3	7.0	11.0
	17.4 <sup>1)</sup>	12.4	14.5

〈주〉 1) 93년중

〈자료〉 국가경쟁력강화 민간위원회, 21세기를 향한 물류경쟁력 강화전략, 96년 1월

- 이와 같은 직접적인 물류비용 외에 교통혼잡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GDP의 3.4%로 추정된 바도 있음.

### 마. 생산의 효율성

- 제조업 종업원 1인당 노동생산성(생산액기준)이 일

〈표-5〉 제조업 취업자 1인당 생산액 한·일 비교

(단위 : 천달러, %)

	1990	1991	1992	1993	1994
한국(A)	56.8	61.1	63.9	68.0	74.9
일본(B)	155.9	171.6	173.8	191.5	205.4
A/B	36.4	35.6	36.8	35.5	36.5

〈자료〉 한국은행,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효율 분석, 96년 10월

본의 1/3수준에 불과함.

- 제조업 노동장비율과 설비투자효율이 일본의 70~80%에 불과함.

〈표-6〉 제조업 노동장비율 한·일 비교

(단위 : 천달러, %)

	1990	1991	1992	1993	1994
한국(A)	35.1	40.7	46.5	53.8	61.1
일본(B)	49.6	56.5	67.2	80.0	89.1
A/B	70.8	72.0	69.2	67.3	68.6

〈자료〉 한국은행,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효율 분석, 96년 10월

〈표-7〉 제조업 설비투자효율 한·일 비교

(단위 : %)

	1990	1991	1992	1993	1994
한국(A)	67.4	68.1	63.0	56.7	61.4
일본(B)	102.6	96.2	84.5	78.0	78.7
A/B	65.7	70.8	74.6	72.7	78.0

〈자료〉 한국은행,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효율 분석, 96년 10월

- 제조업 부가가치율(부가가치/생산액)이 29%로서 일본(37%)에 비해 크게 낮음.

〈표-8〉 제조업 부가가치율 한·일 비교

(단위 : %)

	1980	1985	1990	1994
한국(A)	22.8	24.8	26.5	29.1
일본(B)	29.0	32.9	35.7	37.3
A/B	78.6	75.4	74.2	78.0

〈자료〉 한국은행, 우리나라 제조업의 생산효율 분석, 96년 10월

- 산업간 대기업-중소기업간 연계가 미약하고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최종수요 1단위 증가에 따른 생산유발효과가 낮음.

-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우리나라 에너지소비

량의 GDP에 대한 비율(에너지원단위 = 에너지소비량/불변GDP)이 0.41로서 일본의 4배, 대만의 1.6배에 달함.

- 이 비율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.
- 또한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저유가정책\* 등으로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10년전에 비해 2.4배로 증가함.

\* 우리나라 휘발유가격은 유럽국가들에 비하면 20~30% 낮은 수준이며, 일본보다도 7% 정도 낮음.

## 바. 행정규제

-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제한적인 진입장벽 및 가격규제가 광범위하게 잔존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림.
- 정부가 93년 이후 3,300여건의 행정규제를 완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국제경영연구원(IMD)의 국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 정부부문은 46개 국가중 33위로 평가됨(이는 주로 인위적인 가격통제, 행정의 불투명성, 관료주의 항목 등이 낮은 평가를 받은 데 기인함.)

## 사. 경제주체의 행태

- 최근 들어 소비의 고급화 및 사치적, 과시적 소비 행태가 크게 확산됨.
- 이에 따라 외국 유명 브랜드제품 및 중·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해외여행이 급증하고 있음.
- 기업은 행정규제의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경영여건이 어려워지면 환율절하, 금리인하 등 결과적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음.
- 정부도 잇따른 소비성, 전시성 행사와 낙관적인 장

기전망의 남발로 사회전체의 소비풍조를 조장한 측면이 있음.

- 각계 각층의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 등 비합리적인 행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사회적인 장치가 없음.

### 3. 개선방향

#### 가. 거시경제 정책방향

- 우선 거시경제정책의 중점을 물가안정에 두고 통화증가율을 낮추어 가는 한편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물가를 선진국 수준(2~3% 상승)으로 안정시킴.
- 보다 장기적으로는 성장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경제의 안정과 구조조정을 통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지 않고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.

#### 나. 부문별 정책방향

##### (1) 생산요소시장의 효율성 제고

##### (가) 노동시장의 효율화

- 기업의 경영성과, 근로자의 생산성 변화에 따라 임금이 차등지급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함.
  - 현재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임금체계를 단순화하고 성과급, 능력급 제도의 확대를 유도함.
-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퇴직자의 재취업 촉진 등을 통해 산업인력의 공급을 확대함.
- 이와 아울러 생활필수품 가격의 안정, 사교육비 부담의 축소 등을 통하여 가계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임금안정의 여건을 조성함.

##### (나) 금융시장의 효율화

- 우리나라의 금리가 주요국에 비해 높은 것은 높은 투자수익률과 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, 높은 예상인플레이션율에 기인함.
  - 따라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진정과 기업재무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됨.
-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장단기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.
  - 금융기관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금융기관 스스로가 경영의 효율화를 통해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해 나가도록 함.
  - 단기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, 신용평가의 정도제고 등을 통해 금융허부구조를 강화하고 기업 자금조달원의 다양화를 도모함.
- 한편 금리인하를 위한 외자도입 확대정책은 외자에의 접근이 가능한 일부 대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을 낮추는 효과는 있지만,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환율절상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,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상승을 초래함.
  - 이를 막기 위하여 외자유입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증발을 다른 부문에서 흡수할 경우 통화관리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커 신중을 기하여야 함.

##### (다)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

-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현재 복잡다기화되어 있는 부동산 관련 세제 (취득세, 등록세, 양도소득세, 토지초과이득세 등)를 보유세 위주로 단순화하고 과표를 현실화하여 「이용」보다는 「소유」에 집착하는 토지관을 시정함.
  - 특히 최근까지도 「10년 주기설」등 부동산 가격인상 기대심리가 불식되지 않고 있는바 향후의 부

동산투기 재연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임.

### (2) 기업생산 및 경영의 효율화

- 기업 스스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면서 제품고급화와 신상품개발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함.
  - 현재 기업의 매출액대비 2.2%(94년중)에 불과한 연구개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세제상 유인을 강화함.
    - 아울러 특히 선진국의 70~80%에 불과한 설계 및 디자인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함.
  - 정부도 기초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정보 보급 기능을 강화함.
- 또한 주요 경쟁국에 비해 크게 취약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고 무리한 적대비, 광고선전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지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유인을 강화함.
  - 또한 생산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, 찬조금 등 준조세 부담의 경감방안도 마련함.
- 한편 대기업집단의 경우 무리한 선단식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채산성이 없는 일부 업종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이양하는 등 경영혁신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### (3) 행정규제의 완화와 공공부문의 효율 향상

- 각종 진입장벽이나 가격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시장의 경쟁원리가 최대한 작용할 수 있도록 함.
  -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모든 진입장벽과 가격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존재여부를 결정함.
- 이와 같은 기준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신규 규제 도입에 신중을 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.
  - 규제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, 규제수단의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신규 규제의 도입여부

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제도화함.

- 또한 신규 규제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과후 자동적으로 당해 규제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조항(sunset clause)의 도입을 의무화함.
- 공공부문의 경영의 효율화 또는 민영화를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가격인하를 도모함.

### (4) 사회간접자본의 확충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정부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자유치를 활성화 함으로써 물류비용의 절감을 도모함.
  - 특히 현재 극심한 혼잡과 적체를 겪고 있는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시급히 확대함.
- 이와 더불어 사회간접자본시설 사용료를 「수익자 부담원칙」에 따라 현실화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.
- 또한 기업이 CALS(Computer-Aided Logistics Support)등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물류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통신망 등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충을 앞당겨 추진함.
  - \* 컴퓨터통신망을 이용하여 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과정에 걸쳐서 정보를 표준화하고 공유하는 전자상거래 방식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야야 도입이 추진되고 있음.

### (5)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상 유인 강화

- 금리소득은 상당부분이 원본가치 감소분에 대한 보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세원이 완전노출될 뿐만 아니라 금융저축이 부동산투자 등에 비하여 바람직한 형태의 저축임을 감안 타소득에 비하여 과세상 우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. ♣ <한국은행, 한은정보 '96, 12월호>